'국립5·18묘지관리소'는 불법 건축물

유가족 시설·교육관으로 지었다 관리동 사용 개발제한구역 변경 등 절차 안지키고 추진 市·북구 묵인…관리소 "국비 놓칠 수 없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가 개발제한 구역인 국립5·18민주묘지에 16억원을 들 여 불법(위반) 건축물을 지은 뒤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자 치구인 광주시 북구는 국립5·18민주묘지 내 불법 건축물을 알면서도 공사과정에서 '추인허가'를 조건으로 묵인하는 등 사실 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가보훈처 산하 국립5·18민주묘 지관리소(이하 관리소)와 북구에 따르면 관 리소는 지난 2014년 6월께 국립5·18민주묘 지(이하 민주묘지)에 국비 16억원을 들여 연면적 841㎡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유가족 편의시설 및 교육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완공 후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소는 "지난 2011년부터 '유가족 편 의시설 및 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며 "민주묘지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과 추모객이 마 땅히 자리할 곳이 없고, 교육공간이 부족 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국비 5000만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지난 2013년 건립예산 15억5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유가족 편의시설 및 교육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문제는 관리소가 2013년 3월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민주묘지 내 건물을 짓기 위해 북구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사전 절차인 광주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한 것이다.

북구는 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했지만, 관리소는 해당 공사 가 지연될 경우 건립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 서 광주시와 북구는 관리소의 요청에 따



불법 건축물로 지어져 2년 넘게 사용중인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관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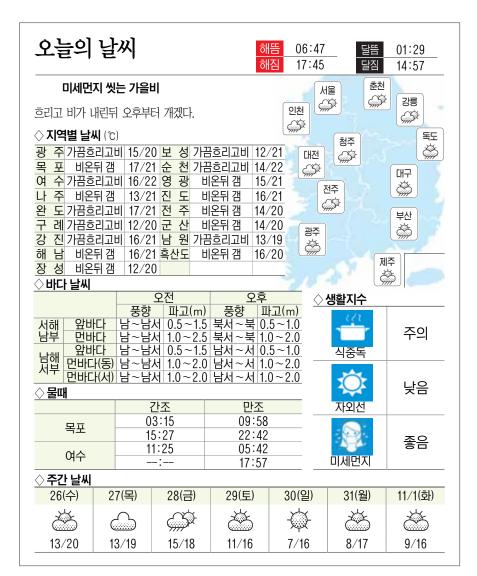
라 '추인허가'를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신축을 묵인해줬다.

관리소는 건물 신축 이후 2층은 5·18 교육장, 1층은 사무소와 휴게시설, 지하는 식당과 문서보관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방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불법 건축물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5·18 교육을 해온 것이다.

당초 계획했던 '유가족 편의시절'도 생 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되레 공사과정에 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무실을 만들기도 했다. 유가족 쉼터는 현재 직원들이 사용 했던 옛 사무실 공간에 마련돼 있다. 관리 소는 현재도 건축물대장 등재 절차를 밟 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도시계 획위원회 승인 절차 등을 밟으면 2~3년 이 소요되는데 그럴 경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비도 반납해야할 상황이었다"며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쉼터와 5·18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국립5·18민주묘지관리 소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인허가' 가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9000만원과 함께 위반 건축물 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



농성동 중복 분양사기 조폭 개입 확인

사채업자 등 시행사에 고리 장사…경찰, 10여명 계좌 추적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에 지역 조폭 두목급 인사와 사채업 계 큰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광주일 보 9월 21일자 6면〉한 사실이 경찰 수사 를 통해 일부 밝혀졌다.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주도한 시행사 측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를 이 용해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에 달하는 고 리를 뜯어낸 사채업자와 조폭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시행사 대표와 사 채업자, 조폭 등을 연결해준 브로커의 존재까지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오피스 텔 시행사 측이 사채업자 등에게 과도한 이자를 뜯기면서 재정 부실과 사기분양 이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시행사 측과 억대의 금전 거래 흔적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

광주서부경찰은 24일 농성동 골든힐 스타워 시행사 대표 박모(56·수감중)씨 와 억대의 금전 거래를 한 채권자가 25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자금 흐름이 수 상한 10여명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인 사들 가운데에는 지역 조폭 간부급 인사 와 경상도지역 방송사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복 분양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 측과 적게는 1~2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에 이르 는 금전 거래를 하며 법정 이자율(25%) 을 훨씬 웃도는 고리를 받아 챙긴 의혹 을 사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시행사 대표 박씨에게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억원을 빌려주고 무려 31억원을 받 아챙긴 황모(63)씨와, 박씨에게 황씨를 소개해주고 알선료 1억3000만원을 챙긴 라모(58)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미미한 자본금으로 오피스텔 신축, 분양을 하다 자금 압박으로 어음 결제를 못 하고 부도 처리될 위기에 놓 인 박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15일 만에 1억원의 이자를 받아챙기는 등 상상을 초월한 고리 대부업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폭력조직 부두목 김모씨도 시행사 측에 돈을 빌려주고 5 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입 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해온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 고 말했다.

·니.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화 옆에서 ··· 24일 오후 광주시 서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화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화분재 동호 회원들의 출품작 100여점과 분재 전문가의 작품 200여점, 촛불·하트·한반도 모양의 조형작이 전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전자발찌 부착 170명

6년새 4.5배 증가…성폭력 84%

광주·전남지역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1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 범죄와 부착 기간이 늘면서 전자발찌 대 상자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됐다.

24일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광주·전남 170명 등 전국적으로 2598명에 달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보호관찰소 관내 (광주·인근 전남)가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순천 33명, 목포 24명, 해남 17명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43명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고, 살인 23명 (13.5%), 강도 4명(2.4%) 순이었다.

2008년 성폭력범죄자의 발목에 전자발 찌를 부착한 이래 유괴(2009년)·살인 (2010년)·강도(2014년)가 추가되고, 부착기간도 제정 당시 5년에서 최장 30년(소급)까지 늘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도급증했다.

광주 관내 대상자 누적인원의 경우 지 난 2010년 29명에서 2013년 97명, 2015년 113명, 올해 132명으로 늘어났다. 6년 사 이 4.5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담당 직원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7명의 직원이 전자발찌 대상자 96명을 담당하고 있다. 24시간 근무 탓에 직원들은 3교대를 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직원 2명이 대상자 96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